

# 우리경제의 회고와 전망

— 새 政治時代에 바란다 —

白 永 勳 / 한국 防産學會 회장  
KID원장, 경제학박사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역할은 실로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화와 개방화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때, 기업확장만을 위해 거의 맹목적으로 치달아온 우리의 기업문명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당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경제의 虛實 — 이념적 空虛

우리나라 기업경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는 기업을 아직도 사회적 공기로써 보다는 개인재산 축적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농후한 점입니다. 제품생산, 시장판매에서 소비자를 마치 이윤추구의 맹목적인 추종자로서만 간주하여 왔고 가격과 질, 그리고 기술을 발판으로 하는 자주적 성장 기량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근본적인 가치의식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오랜 빈곤시대의 역사에서 되풀이 되어온 사회적 혼란속에서 싹튼 불신사조가 기업경영의 폐쇄성을 촉진시켜 왔으며, 믿을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경영을 외부에 대해 참다운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

우리 소비생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비약과 생활의 맹목적 풍요만을 이상으로 생각하여 왔던 우리나라 소비대중도 절제와 질서있는 소비생활의 근대적 시민의식을 외면한채, 경제성장과 저축신장을 웃도는 과소비(過消費) 풍조가 체질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정치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의식이 폭발되고 있으며, 균형과 형평에 대한 국민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는 지금 역사적 일대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90년대는 문명사상 가장 중요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20세기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또 10년, 백년이 아니라 1천년 단위를 구획지어 생각할수 있는 역사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기존의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경제할수가 없음을 선고했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새롭게 경제할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떤 경제적 현상도, 실제도 아직 없는 선행적 상황이며, 다만 새로운 필요를 창출해낼수 있는 경제적 잠재능력이 내재해 있을 뿐입니다.

변혁기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이 동시적으로,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분명, 생산체제가 정보자원을 중심자원으로 하여 형성되는 세기적 경제변혁기입니다.

이 변혁기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잉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변혁기에 함축되어 있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변혁기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질문이며, 이 질문들 한가운데에 잠재되어 있는 非실체의 선형적 인식을 체계화하는 「새로운 인식체계」가 무엇보다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만 경제성장 잠재력 하나뿐인 새로운 시작에서 요구되는 가장 우선적인 필요조건은 새롭게 경제할수 있도록 이해하고, 조직하고, 해석하고, 실천할수 있는 「새로운 경제규칙과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결행되어야 할 것은 「새롭게 경제하려는 의지」가 국민적 차원에서 과연 성숙되어 있는가를 다짐하고 공감하는 작업입니다.

새 정치시대의 경제운용전략 -정책건의-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경제도약은 나라경제의 힘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경제가 활력을 가져야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국가경영을 위한 정책건의는 올바른 경제논리와 실물경제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관행과 정책집행은 나라경제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책제언은 지속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미루어서는 안될 과제들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제언은 국민과 합의하여 국가경영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경제논리에 맞게 이를 모든 문제에 대해 일관성있게 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입안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효과를 전제로한 「대응요법적 정책」이요, 둘째는 복합효과를 전제로한 「원인요법적 정책」입니다.

우리의 경제환경을 예로 들면, 전자는 60년대 경제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가난한 상황」의 극복을 전제로 한 단기성 개발계획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후자는 「현재의 상황」을 현재의 욕구충족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지향성—흔히 백년대계라고도 하는—을 전제로 한 장기성 개발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 두 측면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편향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며, 「전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책의 의미는 「현재적인 것」 이상의 목표지향을 도모하기 때문에 가시적이며, 현재적 의미와 함께 불가시적이며 미래지향적 의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2000년대를 대비한 국가경제 운용전략면에서 새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내일의 경제운용전략 수립에 부쳐 다음 사항들을 가장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용자원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예산에서부터 변혁을 위한 거대한 결단력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그야말로 다다익선, 장구한 세월속에 파묻혀 온 경직성 예산입니다.

GNP 및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年	국 민 총 생 산(GNP)			
	경 상 가 격		'85년 불변가	성 장 륜
	원 貨 (단위: 億圓)	美 貨 (단위: 億\$)	원 貨 (단위: 億圓)	(단위: %)
1987	1,060,244	1,289	996,116	13.0
1988	1,262,305	1,728	1,119,799	12.4
1989	1,417,944	2,112	1,195,767	6.8
1990	1,714,881	2,422	1,306,851	9.3
1991	2,060,265	2,808	1,416,024	8.4
1992	—	—	—	6.6

\* 1992년 : 韓銀 추정치

나라살림의 규모가 1년만에 5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부기구나 투자기관, 보조단체나 정부출연기관들이 과연 우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올바르게 짜여져 있느냐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남은정부 조직법과 규범에 얽매어 있는 수많은 정부기구와 산하기관들이 아직도 거대한 힘을 과시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양되어야 할 허다한 기능이 정부의 독선과 권위주의 속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정부투자기관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민간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산하에 30여개의 정부투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투자기관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민간의 투자능력이 어려웠을때 정부재원으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이제는 민간의 투자능력이나 경영능력면에서 정부기관이 하는 일들을 충분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정부투자기관이 있음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영역이 침해되었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만이 할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불식하지 않는한 내일의 영광된 풍요사회는 이룩될수 없습니다.

**셋째, 퇴장된 기용재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지난 개발연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부연금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제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91년말을 기준하였을때 공공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은 도합 40조원에 달합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정부관리기금이 35개, 민간기금이 30개, 모두 65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방대한 기금은 1년간의 정부예산을 훨씬 상회하였는데,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의 私금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기금이 늘어나는 규모도 연간 10조원을 넘고 있어, 이대로 조성되면 95년에는 총 50조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推計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금은 내일의 국력신장과 생산기반의 확충, 그리고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긴 안목에서 人力의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취약지대는 기능인력을 포함하는 인력수급계획에 있습니다. 기능인력의 부족, 고급인력의 실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열의 실정에 비추어 앞으로 교육문제는 국민적 재원낭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아무리 고쳐보아도 대학 진학의 문은 열릴수 없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에 대학생 수가 전체인구의 5% 수준에 달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대학의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력의 수급구조의 후진성에 있습니다.

대학을 거친 인력이 은행창구에 앉아 일할때 이는 분명히 인력의 낭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학교·직업학교·전문대학 졸업생을 인력 공급원으로 보고, 교육제도·직업제도를 연계체제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기술투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는 기술주도시대임이 명백합니다.

기술혁신, 신기술의 도입, 첨단기술산업의 개발 등 다양한 기술고도화시대에 대비하여 적어도 연간 GNP의 5%에 달하는 기술투자재원의 확보는 물론, 기술인력 개발을 위해서도 한층 더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정부 지원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長期 저리(低利)의 구조 금융체제의 뒷받침을 통해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일곱째, 중소기업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상인조직과 유통업계를 포함하는 중산층의 경제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버림받고 있는 영세상인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시책을 한층 더욱 폭넓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120만명의 中小商人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그야말로 원시적 또는 자생적 경제활동을 통해 나날을 유지하고 있을뿐, 국가정책상의 이렇다 할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8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GNP상에 이들 유통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6.9%에 달하며, 같은 시점에서 농업과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10.9%에 비추어 볼때 국가시책에서 크게 각광을 받아야 할 새로운 분야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여덟째, 해외투자기반을 확충하고 지구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국제화시대, 지구촌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C의 통합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통상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투자를 통해서만이 생존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1,000억불 또는 2,000억불의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해외투자의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여, 해외투자 진출의 기반을 크게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개방화, 선진국의 투자유치 경쟁, 이 모든 국제여건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각 업종에 따라 현지참여 기회를 확대할수 있도록 금융·세제

(稅制)면에서 획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아홉째, 경제규범과 제도를 실체에 알맞도록 폭넓게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경제는 성장규모와 내용면에서 지난날과 비교할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내외적 여건변화는 이를 다스려가는 경제규범과 정부규제방식으로는 도저히 오늘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낡은 제도, 규범, 경제, 법률 등 허다하게 깔려 있는 지난날의 정부주도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낡은 제도에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의 독선과 권위주의를 일소할수 있도록 경제규범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 열째, 민간경제단체를 활성화하고 산업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경제단체들은 정부주도의 경제역량에 억눌려 독자성있는 경제정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한 새로운 활동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는 긴 안목에서 내일의 경제운용 전략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류의 긴 역사과정에서 볼때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치지도력과 기업인, 그리고 국민의지의 결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한 세대의 시대적 소명을 받은 주인공들이 그 세대를 주도할 새로운 사회적 모랄(Moral)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뜻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세대가 물질문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진취적 기상으로 기여했느냐, 또는 소멸적 의지속에서 반전시켰느냐는 것은 그 세대를 이끌어가는 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